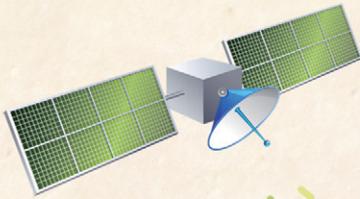


제2019-2호 (통권 23권)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CONTENTS

권두언	05
지난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박찬욱(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심포지움	
사회과학 '한국화' 담론의 사회과학적 재고	07
정용덕(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동과 동아시아	10
최희식(국민대 일본학과)	
한일문화교류와 합의: 한류를 중심으로	12
장원호(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	14
벽돌 한 장 쌓는 자세로 이종원(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ASSREC) 학술대회 참가	18
각학각색(各學各色)	19
북한 비핵화 vs 인권 보호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학회동정	25
협의회 행사	27
협의회 임원진	29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난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며



박찬욱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20대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자 한다. 임기 개시 후 처음 나온 뉴스레터에서 필자는 KOSSREC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부응하여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와 관련된 규정은 “사회과학계 각 학문의 상호협동을 기하고 한국의 사회과학 각 분야의 연구를 기획조직 및 지원하고 학술정보를 교환하며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사회과학 발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KOSSREC의 심포지움, 세미나, 정책포럼 등 학술회의는 주로 다학제적 성격을 지향하여 기획되고 개최되었다. 단독 학술회의는 통상 한 해를 마감하는 정기총회 직전에 열렸는데 2018년에는 ‘사회과학과 데이터’, 2019년에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주제로 하여 열렸다. 그 외의 학술행사는 KOSSREC을 구성하는 참여학회, 대학 연구소, 공공 및 민간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와 민주적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학술회의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필자가 사회를 맡고 정치, 사회, 문화 인류, 행정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학제 간 통섭적 논의를 펼쳤다. 또한 2019년 4월 26일에는 한국문화인류학회와 공동으로 “땅과 인간: 소유와 공유, 죽음과 살림, 재생과 건설”을 주제로 내세워 학술회의 행사를 가졌다.

KOSSREC 참여학회가 아닌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다.

- 2019년 2월 12~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도로 KOSSREC 등의 기관이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혁신적 포용 국가와 균형발전의 일부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세션을 주관.
- 2019년 4월 19일. 미래인력연구원과 공동 개최 ‘서애 류성룡의 현대적 조명’ 학술회의.
- 2019년 5월 24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공동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사회과학분야 대학원교육 발전방안’ 심포지움(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사회복지학, 언론정보학) 개최.
- 2019년 6월 1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신남방지역 정세분석 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및 인도의 최근 대선 또는 총선 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 제언.

KOSSREC은 한국사회과학의 진로와 한국 사회의 시대적 현안을 다루는 국내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과학계를 대표하여 전개하는 국제적인 학술교류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미래인력연구원과 일본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와 공동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를 주제로 하는 아시아미래회의(Asia Future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이 국제회의의 주목적은 보다 나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KOSSREC은 특히 기초강연(주제: 인공지능) 및 기념 심포지움을 주관하였는데 토론 세션에는 필자와

더불어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 대한지리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회장 또는 차기회장이 나섰다. 2019년에는 9월 24~25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제23차 AASSREC(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 회의에 참가하였다. 한국 참가자들은 대주제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과 평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2018년 12월 5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 듀크대 사회학과의 제레프(Gary Gereff)교수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발전' 제하 강연을 마련하기도 했다.

KOSSREC의 영문 학술지, KSSJ(Korean Social Science Journal)은 종전과 다름없이 연 2회 발간되었다.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KCI 등재지 자격을 잠시 상실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편집진의 노력으로 현재는 등재학술지로 손색이 없다. 이 학술지가 학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원고 모집이 용이하지 않은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교류에 기여하고 있는 장점을 더욱 살려나가기야 한다. 향후 심사 및 편집 체계 개선, 발간 회수 증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SSREC은 3년 단위로 추진되어 온 한국연구재단 SSK(한국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SSK 성과의 홍보와 확산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심사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다시 향후 3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언론을 통한 정책포럼 성격의 지상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안민포럼, 주간지 '중앙 이코노미스트'와 공동 기획하여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그 주제는 남북한 관계, 무역전쟁, 미투 운동, 개헌, 대입제도, 댓글문화, 난민 문제, 페미니즘, 저출산, 노인빈곤, 북한 비핵화 등 다양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진단과 해소방안 제시라는 한국사회과학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국가 R&D예산 20조 5,328억 원 중 인문사회분야 순수 R&D는 3,009억 원으로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전혀 늘어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이공 분야에 비하여 과제수혜율이 15.9% 낮고, 1인당 연구비는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KOSSREC의 본 사명인 사회과학 진흥을 위해서 대정부 접촉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민간투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8년 2월과 3월 인문사회분야 대표들과 함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2018년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R&D 관련 국가 예산 가운데 순수인문사회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하는 국회가 이를 실현하는데 노력해주길 촉구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과의 협력에도 관심을 두어, 2018년 11월 13일에 있었던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교류회에서는 필자가 개회사를 했고, 2019년 10월 24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련 단체장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사회과학 연구자와 학술단체는 인문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정부지원 확보에 관심이 저조하다. 인문학 관련해서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약칭 인문학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어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일찍부터 공유되었고 관련 대학, 연구소와 학회가 연합하여 정부지원을 줄기차게 호소해 왔다. 기초 사회과학은 인문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인식과 행동은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KOSSREC은 사회과학의 진흥을 위해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을 아우르는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사회과학자들이 합심하여 연구재원을 확대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회현상을 설명 내지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를 진단하여 해결하는 처방을 내리는 임무를 사회과학의 어느 특정 분과학문 만으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급속한 변동을 겪는 이 시대의 사회과학자들은 연구, 교육 및 봉사에 있어서 융합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사회과학자들은 자신의 전공에 갇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올수록 사회과학 분과학문별로 크고 작은 수많은 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점은 좋은 일이나 이로써 자신의 전문분야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KOSSREC은 복수 학회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마당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로, 15개 참여학회 중 10개 미만의 학회가 매년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다.

지난 2년 동안에도 KOSSREC은 전임 회장님들, 부회장과 감사를 비롯한 임원진, 15개 참여학회의 대표와 회원들이 격려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특히 필자를 도와 실무를 수행한 한정훈 사무국장, 한준 연구위원장, 엄석진 편집위원장, 박진 대외협력위원장, 김종길 SSK네트워크지원사업단장, 전성희 총괄간사, 박효성 편집간사에게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표한다. 2020년과 2021년에 KOSSREC은 김정식 회장님의 선도적 노력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사회과학 ‘한국화’ 담론의 사회과학적 재고 ¹⁾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한국 사회과학자에게 사회과학의 ‘한국화’는 일종의 숙명적 논제다. 근대 사회과학에 관한 한 후발국 학자이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이 문제에 관한 고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학회는 194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했다. 회임과 숙성에 긴 시일을 요하는 학문 발전에 있어서 결코 길다고 할 수 없는 이 70년 동안에 한국 사회과학은 가히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양적 및 질적 발전을 일궈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의 교수 인사에서 국제학술지(SSCI) 논문게재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발전 과정에서 한국 사회과학자들은 자아 준거적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주로 학회가 토론장을 열어주었다. 자아 성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돼 온 한국 사회과학의 핵심 과제 중에 ‘적실성’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학문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대개 두 문제로 집약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 사회과학이 한국사회에 필요한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다. 사회과학이 한국사회의 특성을 제대로(과학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가의 문제가 다른 하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한국 사회과학의 지나친 외래 이론 의존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1960년대부터 사회과학의 ‘토착화’ 혹은 한국화 담론 형태로 전개됐다. 1976년 창립 직후부터 한국

사회과학협의회도 이 담론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선도해 왔다.

한 사람의 사회과학자로서 필자는 이처럼 전개돼온 한국화 담론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받으며 연구하고 가르쳐 왔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지지를 보내왔다. 다만, 그동안 전개된 한국화 담론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주로 이념형에 의한 규범적 접근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향이 그중 하나다. 선학이나 동료가 취한 외래 학문에 대한 자세나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책망하는 식의 평가도 있다.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비평과 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는 해도 특정 연구자의 자세나 학설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지식은 진공 속에서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처한 시공간적 맥락 위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자 또한 그가 처한 시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만든 잣대를 가지고 평가에 임하는 법이다. 이아영·송재혁(2019)의 분석처럼, 월(越)왕 구천(勾踐)에 대한 춘추전국시대(‘國語’와 孟子)와 한(漢)제국시대(‘史記’)의 엇갈린 평가가 좋은 예다. 오늘의 잣대로 그것도 탈맥락적으로 선학이나 동료를 평가하기에 앞서, 왜 그때 그런 자세와 학설을 제기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 혹은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1) 이 글은 2019년 11월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례 심포지움의 기조발제 내용을 발췌한 것임.

사회과학의 한국화 논의 역시 좀 더 사실에 근거하여 전개되면 좋겠다. 규범적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규범적 논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배적인 기존의 학문이 외래 학문과 조우(遭遇)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한 것(혹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규범적 평가나 처방에 앞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혹은 질 것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규범적이든 사실적이든 사회과학의 한국화를 논함에 있어서 문명 진보라는 좀 더 넓은 안목과 긴 시계에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후술하는 것처럼,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문명의 한 부분이고, 학문의 발전은 곧 문명 진보의 일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의 발전을 설명하고 평가함에 있어 문명 진보의 역사를 통해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화 논의가 특히 외래 학문에의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 문명의 진보는 늘 외래 문명과의 능동 혹은 수동적 조우를 통해 이뤄져 왔다.

18C 중반에 선발국(영·불·미)에서 역사철학자들에 의해 제기 되고, 20C 전반에는 주로 역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던 문명 담론이 20C 말 이후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인류의 역사는 문명화의 역사”이며, 미래의 국제질서는 “문명의 충돌”이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본 정치학자 헌팅턴(Huntington 1996)의 기여가 있다.

역사철학자 이한구(2019)에 의하면, 문명은 삼중 구조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문화유전자의 집합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핵 부분’(종교, 문학·예술, 철학 등의 근본적 신념체계), ‘중간부분’(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체계), ‘외곽부분’(자연적·물질적 하부 구조와 그 바탕이 되는 과학기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체계와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 과학은 문명의 중간부분에 속하는 셈이 된다.

사회와 사회과학은 문명의 중간 층위에 위치하면서 같은 층위의 요소끼리, 혹은 안(즉, 신념체계)과 밖(즉, 과학기술체계) 층위의 요소들과 긴밀하게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다. 그러면서 그 자체 혹은 다른 문명 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문명 전체의 진퇴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일부인 행정과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은 태초부터 “문명과 항상 더불어 존재해 왔고, 지금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 심지어] ‘천지창조(the Creation)’에 참여했다”는 왈도(Waldo 1980)의 수사가 이점을 강조한다.

문명은 이처럼 그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외래 문명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도 진퇴가 갈릴 수 있다. 역사에서 하나의 문명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그리고 원하던 원치

않든, 항상 외래 문명과 조우해 왔으며, 이 과정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문명의 일부인 학문도 외래 학문과 조우하면서 변화가 이뤄지는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문명(그리고 학문) 간의 조우가 있을 때 발현되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 대개 다음과 같은 세 이념형으로 유형화되고 있다(Huntington 1997; 강정인 2004). 첫째, 외래 문명을 적극 수용(소위 ‘케말주의’ 혹은 ‘동화’)하는 자세로서, 소위 ‘소천하주의(小天下主義)’나 ‘서도서기론(西道西器論)’처럼, 당시의 선진 문명을 적극 수용하여 동화를 꾀하는 경우다. 둘째, 적극 배척(소위 ‘거부주의’ 혹은 ‘역전’)의 자세로서, 소위 ‘사문난적(斯文亂賊)’이나 ‘동도동기론(東道東器論)’처럼, 고유-외래 문명 간의 차이를 유지·강화하려고 한다. 셋째, 적극 융합(소위 ‘개혁주의’ 혹은 ‘혼용’)의 자세로서,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처럼 고유의 가치·관습·제도는 유지하면서 외래 물질문명만 수용하거나, 아니면 ‘선택적 서도서기론(西道西器論)’처럼 신중히 선택하되 모두를 융합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념형은 이념형일 뿐, 현실에서는 모두 ‘융합’으로 귀결되게 마련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두 차례에 걸친 한민족 문명전환의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양극단 이념형(즉 ‘동화’와 ‘배척’)의 경우, 다른 극단적 이념형의 장점을 상쇄하는 정도가 높으며, 그만큼 갈등과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늘어난다. 예로써, 배척의 경우, 바람직한 외래 문명을 취하지 못하는 단점에 더해, 강한 외세의 강압적 동형화 압박 하에서 자칫 공동체의 쇠퇴나 멸망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고조선 말기와 조선 말기에 외래(즉, ‘제국’의) 문명을 배척(鎖國)하는 자세가 규범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적실하지 않았던 이유다. 반대로 동화의 경우, 기존 체제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변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문명의 중핵 부분(즉, 신념체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문명 요소의 변화는 신념체계, 사회체계, 과학기술체계의 순으로 가능성이 낮은 법이다. 독일식 관념(Elias 1939)으로 표현하면, ‘정신 문화’보다 ‘물질문명’의 변화가 쉽고, 헌팅턴의 개념으로는 ‘서구화’에 비해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쉽다. 19C 말 외래 문명의 수용을 마치 ‘훈(魂)을 팔아먹는 행위’로 매도한 것은 문명의 신념 체계(정신문화 혹은 서구화)는 변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무지해서 혹은 정략적으로) 간과한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극단 이념형의 순기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현대 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처음부터 융합), 일본(처음부터 동화), 한국(병행 후 최근 한의학의 융합 시도) 간에 차이가 있듯이, 외래 문명에 대한 대응 자세나 전략에 따라 변화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한다. 양극단 이념형의 옹호가 길항작용을 통해 문명(혹은 학문)의 변화 속도나 폭을 조절하는 긍정적 효과를 빚어낼 수 있는

이유다. 일테면, 동화는 전통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성향이 높은 사회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배척은 극단적인 변화 추구로 인해 전통 문명의 '씨앗' 조차 없애는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극단적 이념형을 각각 옹호·반대하는 자세와 학설이 담론 과정에서 원활히 전개되면서 순기능을 창출해 내는 융합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 사회과학의 한국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되새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해 보았다. 한국화 문제를 좀 더 넓고 길게 조감해 보기 위해 상위 개념인 문명 진보와 연계해 보려고 했다.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과학 연구에서 적실성 문제에 대한 자아 준거적 성찰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강조돼야 한다. 사회과학이 탐구해야 할 대상으로서 한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이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용한 지식과 방법론을 적극 발굴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이 경우에 전통 학문과 외래 학문을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 외래 학문에 대한 양극단 이념형에 편승하여 지나친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으로의 지나친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 양극단 이념형이 순기능적으로 작동되도록 열린 담론이 펼쳐질 수 있어야 한다. 서구 근대 사회과학의 수용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전통 학문의 발굴·보존·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이 한 예다. 전통 및 외래 학문의 적절한 융합에 의해 적실한 한국 사회과학 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한 토대가 필요한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전통 학문에 의해 서구의 근대학문을 넘어 설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해 볼직하다. 유대-기독교 전통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미국 행정(학)의 이분법-즉, "집권 대 분권, 많은 참여 대 적은 참여, 정치 대 행정, 효율 대 형평, 합리성 대 감성, 안정 대 변화, 기대 확대 대 기대 축소, 자유 대 평등, 공동체주의 대 개인주의, 공 대 사, 관료주의 대 민주주의" 등 상충하는 행정 가치들(Waldo 1971; 1980) 혹은 "사이몬이 지적했던 미국 행정의 패러독스들"(Berry 2019)-을 유불선이 융합된 동아시아 전통의 사고방식('중용'이나 '음양' 등)으로 극복하는 가능성의 탐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동과 동아시아¹⁾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공교롭게도 중국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며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변화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작위 위헌 판결,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2018년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로 심화된 역사갈등은 혐한, 노재팬 캠페인 등 양국 국민 감정을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일 스왑 협정 중지, 지소미아 연장 중지 등 경제 및 안보분야까지 갈등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2010년 이후 한일관계의 악화는 어찌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전승국과 식민지 국가를 구분해서 각각 배상과 청구권으로 전후처리를 이원화시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일 역사갈등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독도 문제, 센카쿠 문제, 북방영토 문제 등 현재 일본을 둘러싼 영토갈등은 이들 문제를 미확정 상태로 방치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화조약과 같은 날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을 시점으로 구축된 허브앤 스포크 시스템은 대륙의 공산국가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해양 반공망의 성격이 농후하였다. 그렇게 지리적으로

분열된 동아시아 이데올로기 대립은 반도국가인 한반도에 내재화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한반도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그에 기인한 반인도적 범죄를 단죄하기 시작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입장도 강경하다. 어찌 보면 이러한 한국의 주장과 노력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무의식적 도전, 혹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을 향한 몸부림에 가깝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 정부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일갈한다. 강제동원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하라고 한다. 일본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한국이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듯 작금의 한일관계 갈등은 역사문제, 영토문제, 안보문제에 있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변화된 동아시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1) 이 글은 2019년 11월 29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 연례 심포지움의 발표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체제의 근본적 모순이 한일갈등의 형태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한일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는 동아시아 역사, 영토, 안보문제의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일갈등의 가장 중요한 양상인 역사문제는 기실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에 침묵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보완하며 진보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담화,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거쳐, 간 담화를 통해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면화시킨 강제동원 문제는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마지막 관문에 가깝다.

독도문제 또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65년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 주변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하여 공동 어업활동을 추구하며 78년 한일 대륙붕협정에서 중첩영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관리해 왔다. 이렇게 영유권 문제와 자원 이용문제를 분리하며 양자관계의 발전을 위해 영토갈등의 확산을 자제하는 정신은 98년 한일 신어업협정에도 잠정규제수역 설정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다케시마 조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등 독도문제가 중요한 갈등사항으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일본의 도발을 견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안보문제는 전선(戰線)국가 한국과 후방기지국가 일본의 연계, 이른바 특수관계 혹은 유사동맹관계를 이루며 간접적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협력은 정치성을 가미한 경제협력(방위산업과 연계된 중화학 공업 지원 등),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자유로운 한반도 전개(한국조항), 한반도 핵우산 확보를 위한 핵의 일본 반입 허용 등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일 안보갈등은 심각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대중관계의 균형성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은 중국 경사론을 유포하며 대항하고 있다.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허들을 높이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방해꾼으로 비쳐지며, 재팬 패싱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결국 지소미아 연장 파기, 레이더 조사 문제로 한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중지되었다. 기실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는 예전과는 달라졌다.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된 지금, 한일관계를 60년대 방식(냉전형), 90년대 방식(탈냉전형)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찌 보면 한일 양국 모두

90년대 방식으로 정의내려진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새롭게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기에 정치 리더십과 국민여론은 미국과 중국 문제에 골몰할 뿐 한일관계를 등한시하고 있다. 아니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큰 그림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두 손 놓고 있다는 게 올바른 표현일지 모르겠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슈퍼 파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두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중국과의 대립적 상황도 감내하려는 아베 내각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을 심화시켜 '동맹 관리'를 위한 엄청난 비용(방위분담금 지출, 원하지 않는 전쟁에의 참가 등)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언젠가 국내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는 원칙외교를 고수하면서 대중 관계는 긴밀화하고 있다. 대일 관계를 도외시한 채 중국에 경사하는 한국에 미국의 경고장이 언제 날라 올지 모른다. 박근혜 정부 시기, "미국의 반대편에 베풀하는 것은 좋은 베풀이 아니다"라는 바이든 미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조금만 돌아보면, 아베 내각 이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딜레마를,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전의 이명박 정부는 아베 내각의 딜레마를 비슷하게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중 양강 시대에 직면하는 외교적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 중국 경제에의 과도한 의존에 따른 위험성 회피, 미국에의 과도한 안보 의존에 따른 위험성 회피 등 여러 면에서 한일 양국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실 아세안(ASEAN)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중견 국가(middle power)로써 아세안을 포함하여 미중이라는 슈퍼 파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기 발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한국 외교와 일본 외교의 지평선을 확장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한일관계의 전략적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생적 공존'을 추구하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생적 공존'의 정신으로 작금의 역사문제, 영토문제, 안보문제를 풀어낸다면, 대륙과 해양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전제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한일관계를 기점으로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안보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한일문화교류와 합의: 한류를 중심으로 ¹⁾



장원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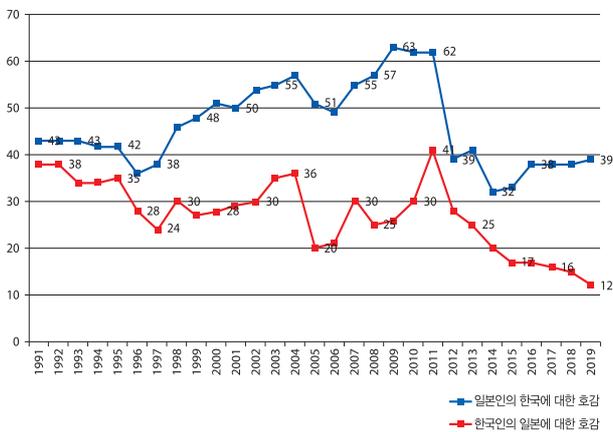
2003년 초 NHK의 위성채널(BS)에서 겨울연가를 방영하기로 했을 때, NHK의 누구도 그 드라마가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겨울연가는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방영되었고 당시 너무 인기 있어 12월에 재방영이 되었다. 그래도 인기가 식지 않아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지상파에서 방영되었고, 최종화는 심야 11시라는 늦은 방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역에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즉, 어딘가 촌스럽고 지저분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라는 이미지에서 모던하면서도 도전적이고 동시에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한국인의 이미지가 변하였다. 겨울연가의 대히트 이후 일본의 각 방송국 지상파에서 방영된 드라마의 개수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00개가 넘는다. 2012년 1월 필자가 일본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드라마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을 때, 한 응답자는 한국드라마가 '인생의 의미'라고까지 대답했다. 또한 2011년부터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로 대표되는 K-POP 아이돌 그룹의 인기는 당시 오리콘 월간 차트 1위를 여러 번 차지할 정도로 대단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언급을 일본의 보수 야마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인기는 많이 시들었지만, 여전히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본 팬

층은 견고하게 존재하고, 트와이스나 BTS의 인기에서 알 수 있듯이 K-POP의 인기 또한 매우 높다.

한국 사람들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 또한 계속 증가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일본대중문화를 일부 개방한 후, 단계적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개방하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4차 개방에서는 일부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였다. 처음 일본 문화를 개방할 당시에는 일본에 문화적으로 종속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결과는 한국의 대중문화계가 일본 대중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한국형 대중문화를 탄생시켰다. 또한 2010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맥주, 사케, 그리고 이자카야는 한국의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었고, 이촌동, 압구정동, 홍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일본식 이자카야 문화는 현재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전국의 대도시로도 확산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일본으로 여행하는 한국인 여행객의 증가인데 2000년 백만 명이었던 여행객 수는 2018년 750만 명으로 18년 사이에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까지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국가는 일본이었고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일본 여행 선호도는 매우 높았다. 심지어 일본관광청의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1) 이 글은 2019년 11월 29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 연례 심포지움의 발표내용을 발췌한 것임.

“일본에서 진정한 당신을 만나세요.”라는 문구가 실리기도 했다. 이렇듯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계속 확대 되어 왔지만, 2012년부터 양국의 정치적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주요 원인은 양국의 보수 정권이 내쇼널리즘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정권의 이익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국 내 지지율은 높였지만, 당시 아주 좋았던 일본인의 한국 이미지를 급격히 추락시켰다. 여기에 일왕에 대한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62%였던 한국 호감도는 42%로 급락하였다. 일본 또한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면서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를 20%로 떨어뜨렸다.



<표 1>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그 후 양국의 보수 정권은 미디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상대국의 부정적인 정보 중심으로 자국민에게 전달하였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종합적인 진실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국 보수 정권의 미디어 통제는 <국경없는의사회>의 ‘세계 언론자유도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언론자유도가 높은 나라였지만 2009년~2017년 기간에는 언론자유도가 약간 낮은 나라로 분류되었다. 이후 2018, 2019년도에는 다시 언론자유도가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언론자유도가 떨어진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까지는 언론자유도가 높은 나라였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언론자유도가 약간 낮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국 미디어의 상업주의적 센세이셔널리즘도 작용했다. 즉, 양국 간의 감정이 좋지 않으니 이를 이용한 보도나 프로그램에 시청자의 관심도 높을 것이고, 시청률 증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국에 부정적인 보도나 프로그램을 우선하게 된다.

2019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감정적 반감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일 갈등과 반감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양국의 미디어가 좀 더 성숙한 보도를 해야 한다. 또 양국의 지도자가 자국의 정치적 상황에 한일 관계라는 변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 해결책은 직접적이지만, 현 상황에서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문화교류와 일반 시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양국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되었을 때인 2019년 7월에 개최된 BTS 일본 공연에는 나흘 동안 20만 명 넘게 운집하여 소위 ‘떼창’을 하면서 열광한 사실은 K-POP을 통한 양국 젊은이들의 높은 문화공감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21일 자 <일본경제신문>의 “식지 않는 한국어 열풍, 일본의 젊은 층 K-POP 등에 관심이 높아” 기사에 따르면, 한일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는 2만7천 명으로 지난해 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한국어 능력시험이 처음 일본에 도입된 1998년에는 1,500명만이 지원했으니 20년 사이에 지원자가 1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한다. 정치적 소통과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양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한류 등을 통한 문화적 공감이다.

벽돌 한 장 쌓는 자세로 *



이종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의 협의회와의 인연은 전임 회장이었던 정운찬 교수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이 선생을 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는 말씀과, 그러나 선출된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 총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언이었다. 협의회와의 인연이랬자 회원학회인 한국경제학회 회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한두 번 참석해본 것이 전부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정 회장의 언질에 하등의 의심 없이 회의에 참석했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전격적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과정을 그저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양할 말미조차 주지 않았고 고사해 볼 분위기도 아니어서 엉겁결에 수락하고 말았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협의회 연혁이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다 시피 했기에 차후 어떻게 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도 정운찬 교수의 후임이 되는 것이어서 이는 마치 이미지 다음에 노래해야 할 가수의 입장과는 같았다. 그러나 일단 앞질러진 물이니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회의를 나섰었다. 이후 마치 대학입시 준비하는 심정으로 협의회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 회장이 국무총리로 선임되는 바람에 정 회장의 잔여 임기까지 채우게 되어 결국 2년 반 이상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했다. 힘에 겨운 과정이었으나 사회과학 제 분야에 대해

비로소 견문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재임 기간 동안 나는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갔다.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개인 회원 증대에 매달리기 보다는 회원학회와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학술활동의 기반을 확대한다.

둘째, 학회활동 및 학술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확충 하거나 새로 구축한다.

셋째, 정책 세미나는 융·복합적 접근이 요청되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개최하되 회원학회들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참여의 폭도 넓히고 참석인원도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 하도록 한다.

넷째, ASSREC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ASSREC 총회 유치를 계획하되 우선 그 사전 준비작업 차원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정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다섯째,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여섯째, KSSJ의 위상을 높여 세계적 수준으로 웅비할 수 있는 체제정착에 기반을 다진다.

일곱째, 변화된 여건에 맞는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정관을 개편한다.

* 2016-1호부터 협의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들은 장차 본 협의회 역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지지부진했던 회원학회의 회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시키고자 회비를 회원학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회원 학회 모두가 납부하도록 유도하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협의회가 회원학회에 줄 수 있는 구체적 혜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며 접근했던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경제인문사회이사회와의 협조를 얻어 회원학회 모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였던 사례를 들 수 있다.(당시 정부의 주 관심사 중 하나였던 공생발전에 관한 연구 과제를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진근 교수의 배려로 공동 연구함)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off-line 유인물 단계에 머물러 있던 newsletter를 on-line 형식으로 확대하여 발간하고 회원과 회원학회에 배부하였다. 그리고 KSSJ의 홍보 확대차원에서 해외 배부처를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KSSJ의 이전 게재 논문을 모두 PDP파일을 DB화하여 저장함으로써 검색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최근 게재논문들에 관해서는 pop-up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검색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home page를 대폭 개편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창립 이후 발간된 도서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협의회 사무실에 체계적으로 정리·비치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세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정치학회, 경제학회, 사회학회, 심리학회 등을 비롯한 전체 회원학회들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관행을 체계화 하였다. 그 결과 2-30명에 불과했던 청중을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100명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차 임기 중에는 한국 여성학회와 국제개발협력학회를 새 회원 학회로 영입하였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협조 하에 SSK 사업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고(임현진 교수의 헌신적인 노력에 크게 힘입음) 이와 관련하여 연구재단으로부터 사회과학 webzine(연 4회 발간, 연 1억원)발간하는 사업계약을 맺게 되었다. 홈페이지 구축과 웹진의 발간은 거의 전적으로 임병인 사무국장의 노고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네 번째 목표의 사전 점검 및 실현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연구위원장 윤인진 교수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음), SSK 다문화 연구단,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상돈 사무차장의 노고가 컸음)등과 공동으로 정규 국제학술대회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였는데 약 15편에 달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고려대학 운초우선 교육관에서 개최)

다섯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인문사회이사회, 아시아연구소

(소장: 임현진), 유네스코 한국지부, Korea Foundation(KF),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KOSDA 등과의 업무협약 또는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을 수행하였다. 단, KF(당시 이사장은 김병국 교수)와 공동으로 한국학 연구에 관한 한국학 관련 magazine을 발간하려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다.

여섯 번째로는 협회의 공식 연구논문집인 KSSJ를 궁극적으로 SSC에 등재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 작업에 관한 한 편집 위원장이었던 김홍범 교수와 부편집 위원장이었던 배상훈 교수의 노고가 실로 컸다. 우선 표지디자인의 개선과 활자체의 개편, *Notes for Contributors* 전면 개정, *Aims and Scope* 전면 수정, 영문판 편집위원회 규정 작성, 연구윤리 규정의 영문화 작업, 그리고 English reader제 도입(홍익대 Karen Dawn Ryder 영입)부터 시작하여 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Template 제정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그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진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하게 된 KSSJ를 등재후보지로 이내 복귀시켰고, 그로부터 2년 후엔 등재지로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질적 내실화와 국제적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출판사 Springer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널을 on-line발간(국내에는 off-line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석학(Jason F. Shogren, William K. Cummings, Franklin Allen 등)들의 논문을 매호마다 1편씩 원고료를 지출해가며 일정 기간 게재함으로써 SSC/등재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외국인(미국 4인,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 1인)편집위원을 확대하였다.

일곱 번째로는 이상과 같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다(2010, 3, 5).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를 한국 사회과학협의회로의 명칭 변경 명문화, ASSREC 등 국제 학술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항목 신설, 명예회장 제 신설(바로 직전 회장을 위촉), 행정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사무국으로 일원화, 그리고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위원을 회원학회 추천으로 협의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의 명문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기록 차원에서 임기동안 실현한 주요 학술 행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연구 활동

[2010년]

- (1) 한국사회의 불평등 제5차 연구 (2009년 2월 - 2010년 6월):
연구 책임: 성균관대 사회학과 김삼욱 교수

- (2) 여성정책 10년 회고와 전망 (2010년 5월 - 2010년 9월):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 책임으로 연구하고 “동년 7월 8일에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이란 주제의 세미나 개최.

[2011년]

- (1) 선진사회를 위한 미래 여성정책의 전망(2011년 7월 - 2011년 12월): 여성가족부 후원
- (2) UNESCO World Social Science Report 2010 연구 분석 (2011년 5월 - 2011년 12월): “세계 사회과학의 현황과 과제 : 한국의 분석” 세미나 개최(2011. 12. 1)
- (3)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 성과 홍보 · 확산 : 기간: 2011. 6. 1. - 2012. 5. 31(1년) : 2011.6.3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 2011. 12. 2 SSK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4)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토대기초연구지원 사업: :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공동사업 (2011. 11. 1. - 2014. 10. 31)

□ 주요 정책세미나 활동

[2010년]

- (1) 2010년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0년 4월 23일, 성균관대학교
- 주제: 한국사회와 형평과 불평등
- 생명보험협회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원
- (2) 2010년 제2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0년 5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
- 주제: 한국사회 갈등의 진단과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국무총리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원
- (3) 2010년 제3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0년 7월 8일, 한국은행 별관 13층 대회의실
- 주제: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
- 여성가족부 후원
- (4) 2010년 제4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0년 11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주제: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한 국격(國格) 제고방안
- 국제개발협력학회와 공동 주최
- 후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연구원,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 (5) 2010년 국제학술대회
- 2010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강당 203호

- 주제: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성원권의 재정의
- 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SSK 다문화교육연구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년]

- (1) 2011년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6월 9일, 건국대학교
- 주제: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 한국정치학회와 공동 주최
- (2) 2011년 제2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6월 3일, 코리아나 호텔 7층 state room
- 주제: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전국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와 공동주최
- (3) 2011년 제3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7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선진사회를 위한 미래 여성정책의 전망
- 여성가족부 후원
- (4) 2011년 제4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9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모색: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접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 국무총리실 후원
- (5) 2011년 제5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10월 20일-21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 주제: 아시아가 마주한 글로벌 도전: 새로운 발전 모델과 지역 공동체 건설
- 발표: Jan Nederveen Pieterse 외 33명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공동주최
- (6) 2011년 제6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12월 1일, 유네스코회관 11층
- 주제: 세계 사회과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분석
- 유네스코 연구비 지원
- (7) 2011년 제7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12월 2일 9시-13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제: 갈등해결과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과학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
- (8) 2011년 제8차 정책세미나 개최
- 2011년 12월 2일 15시-18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제: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에 대한 SSK연구를 위한 특별세션
- 한국연구재단, 고려대학교 연구처 후원

□ 기타주요 활동

- (1) 홈페이지 개편 완료 (2010년 10월 6일)
 - KSSJ 연도별, 호별로 검색 가능 (PDF파일)
 - KSSJ 논문은 PDF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재
 - naver, daum, nate, google 검색 가능
 - KSSJ 별도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 (www.kssj.org)
- (2) ASSREC 회의 참가
 - 인도네시아에서 2011. 10. 17. - 10. 19. 동안 개최
(매 2년마다 개최)
 - 정용덕 차기회장과 강성남(방송통신대) 교수 참가

이상과 같은 일을 추진 및 수행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크게 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학회 추천으로 위촉받은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대과 없이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임병인 사무국장과 이상돈 사무차장, 윤인진 연구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회 김홍범 위원장과 배상훈 부위원장의 노고에 본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은 단지 누가 주어진 임무에 적절한 분인지를 알아내고 이분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serve하는 일이었다고 믿는다.

끝으로 본 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애로 사항, 즉 개인 회원 확대의 한계, 이에 따른 저조한 청중 참여도 문제는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일이며 회원학회와의 연대 강화와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 정착 등을 통해 꾸준히 해소시켜나아가야 할 과제라 믿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협의회 위상과 활동의 격상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KSSJ 의 SSCI 등재를 실현시키는 일이라 믿으며 삼가 회원 모두에게 노력의 배가를 촉구한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AASSREC) 학술대회 참가



한국 사회과학 주요 분야의 대표 학회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미래인력연구원의 후원으로 제23차 AASSREC회의에 참가하였다. AASSREC(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을 대표하는 회원 학회의 사회과학자들이 학술교류를 하는 장으로서 격년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23차 회의로서 하노이 소재 베트남 사회과학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주재아래 2019년 9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이번 학술회의에 박찬욱 회장, 이진규 전 회장과 논문 발표자로서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경묵(동국대 북한연구소) 연구원, 김용균(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와 권혁주(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회과학자들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AASSREC은 아래와 같은 취지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과 평등(Security and Equality for Sustainable Futures)”을 학술회의의 주제로 제시하였다:

In the Anthropocene, human activities are recognized to have a significant global impact on the Earth's geology and ecosystems. This in turn requires inclusive and coordinated actions to ensure equality and security for human beings. Equality is a basic human right and is built on recognition of diverse values. Security includes not just military and political security but environmental,

resource and livelihood security.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ve a vital role to play in clarifying and developing principles, norms, rules and institutions to undertake actions, and in participating in the dialogue among citizens and policy makers to achieve such a sense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to contribute to transformations to the sustainable world.

그리고 4개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다. 즉 “Assessing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Dealing with Increasing Inequality and Conflict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for Security and Equality”, 및 “Transformations to the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이다. 소주제와 관련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표자의 논문 제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서정건, “Only Trump Could Go to Pyongyang? American Domestic Politics and Changes in US Security Policy toward Asia”; 이경묵, “In between the Idea of Empowerment and Capacity Building: Focused on a Case in Urban Slum, North Jakarta”; 김용균, “Civic Solidarity: Civicness and Willingness to Pay for the Poor in Vietnam”; 권혁주, “Why and How Should Asian Nations Help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본 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SSK-Networking지원사업단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기사를 ‘각학각색(各學各色)’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기사 한 건을 여기에 전재합니다.

SPECIAL REPORT

본지·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 공동기획 '각학각색(各學各色)'

북한 비핵화 vs 인권 보호 어느 것이 우선인가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일 때가 많다. 한정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시각과 자세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와 공학자가 만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다.

본지는 사회과학협의회(회장 박찬욱)·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SSK네트워크 지원사업단(한국연구재단후원)과 공동으로 복잡다단한 시대의 화두와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보고 조망하는 취지의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열네 번째 주제는 교육학·정치학·개발학·국제법학·경제학 등 5개 분야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보호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배경과 전망, 대책 등을 진단·조언했다. 분야별 시각 차이를 흥미롭게 살펴보다 보면 자연히 융합의 눈을 뜨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학제 간 협력을 위해 1976년 설립된 15개 사회과학 분야 학회의 연합체다. 안민정책포럼은 좌우통합을 위해 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1996년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다.

‘순진한 실재론자’에서 벗어나야

진보·보수 모두 자신의 가치만 고집...진정성 인정 받을 노력 병행해야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학생 인권 강조에서 보듯이 인권은 진보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것도 인권이다. 그러함에도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진보 교육감 중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로 삼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현 정부가 북 인권 보호는 뒤로 하고 북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타당한가? 왜 보수는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 한반도에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둘 다 중요한데 왜 우리 정치권은 이 두 가지 이슈가 상충한다고 생각할까?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갈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 이슈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보수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붕괴라고 진보세력은 믿고 있다. 이런 의심이 사실이 아님을 보수가 보여주어야만 인권 이슈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수가 국내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확대에 앞장선다면 보수의 보편적 인권론 주장은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도적 지원에도 보수가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인도적 지원중단이라는 인권 파괴적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주장하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수가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북한 주민의 기본 인권이 개선되고,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의 입지도 넓어질 것이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인권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실현 가능성은 큰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3월 실시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실태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북한 난민 대규모 발생 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책’에 대해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5.6%로 2017년 49.6%보다 크게 줄어 들었다. 과도한 해석 같지만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가 국민들의 정서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여행 제한 조치를 포함한 표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마저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할 무기로 인권문제를 이용했지만, 싱가포르회담 이후 인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강대국의 역학관계와 태도를 볼 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의도한 결과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 비핵화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는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인 인권과 관련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수세력의 시도를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보수가 진정성을 가지고 인권보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런 진정성을 보여야 진보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북 인권 보호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사회권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북 비핵화 노력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 타인은 이데올로기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믿으면서도 자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는 사람을 ‘순진한 실재론자’라고 한다. 정치권이 순진한 실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도록 국민이 깨어날 때 한반도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교육의 역할은 깨어 있는 국민을 길러 내는 것이다.



박남기 교수는...

전국교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정치학

구체적 성과 내고 남남갈등 관리해야

대화가 깜짝쇼로 그쳐선 곤란...북한 믿을 수 있는 실천도 필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취 임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는 게 대통령의 지지도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아직 다르다. 지금도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2위권이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40% 후반 또는 50% 초반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은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 대통령 지지도를 유지하는 버팀목 중 하나는 남북관계였다. 지난해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7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다. 대북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박해졌다. 최근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51%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였다.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대목이다. 지난 해 11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 64%가 공감했던 것과 대비된다.

북한 신뢰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올해 5월 조사를 1년 전과 비교하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나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전환 등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는 의견은 58%에서 26%로 줄었다. 이와 달리 북한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걸로 보는 의견은 20%에서 61%로 늘었다.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은 엇갈린다.

올해 5월 조사를 보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44%)을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근소하게 앞서는 모습이다.

'대화와 지원 우선'에 대한 지지 감소는 '체제 변화와 제재 우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정책은 어떤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미 동맹 강화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다자 외교 강화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남북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정 중요도에서도 뒤로 밀린다. 올 3월 대북 관계는 10대 국정과제 중 최하위 우선순위 과제였다. 결국 요점은 분명하다. 첫째, 비핵화든 뭐든 만남과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성과가 전제돼야 한다. 대화와 지원이든 제재와 체제 변화든 모든 게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문제의 해결 수단이다. 두 대립되는 방법의 적절한 조합과 강약 조절로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둘째, 북한의 행동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북한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변화는 상징적이다. 2013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의 조사를 보면 대북 지원 중단 의견이 46%, 55%, 57% 그리고 54%로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 유지 의견은 47%, 35%, 39% 그리고 38%였다. 주목할 건 조사 시점인데, 2013년은 북한의 3차 핵실험, 2016년은 4차 핵실험, 2017년은 ICBM급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올해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의 조사 결과이다. 국민들이 북한을 믿고 대화와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느냐 아니냐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셋째, 남남갈등의 관리가 중요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 의견은 확연히 갈린다. 진보층의 대북정책 긍정 평가가 74%지만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68%다.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엇갈림은 우리 내부의 소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갈등관리는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권과 지도자들의 몫이다.



박명호 교수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이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이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개발학

한반도에 지속가능발전 개념 투영해야

비핵화·통일이 지구촌 평화에 기여...남북 경제협력은 한국·동북아 국가에 경제적 이득
박태인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연구교수

한반도 비핵화·통일·평화 담론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측면과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비슷하다.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은 '어느때와 다른없는(business as usual)' - 여러 폐해를 일으킨-기존 발전 경로에서 하루빨리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가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한다는 시나리오에서 출발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은 경제·사회·환경 분야로 나뉜다. 경제 발전을 통해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을 이루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며, 다음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을 소중히 이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다.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도 이와 비슷하다. 규범적인 측면은 비핵화 및 통일에 의한 한반도 평화(Pax Koreana)가 지구촌 평화(Pax Universa)를 가져온다는 믿음이다. 한민족의 재결합과 민족성 담론도 규범적인 측면에 속한다. 분석적인 측면은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다. 한반도 평화가 우리에게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폭제가 되리라 기대한다. 역대 경제협력도 마찬가지다. 가령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협력을 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남북한이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경로로 발을 옮기기 위한 필요 조건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결국 북한 비핵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체제 변화에 대해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및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를 높여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의 유일한 보루가 핵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변화 모두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다. 우선순위를 논하기보다는 두 방향이 서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핵화 협상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북한을 설득하고 점진적인 체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규범적 이자 분석적인 이유(rationale)이다.

국제사회는 정권의 정당성과 정치적 포괄성이 약하고 인권 수준이 극도로 낮은 북한을 취약국으로 분류한다. 이런 국가 취약성(fragility)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일도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빈곤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청정 에너지,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 행동,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이루어졌다. 목표인 동시에 나머지 목표들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 16·17번 목표는 각각 평화·정의·인권·제도와 글로벌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변화에 직결된다.

북한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실패한 방식을 답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참석해 '자발적 국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을 제안한다. HLPF는 매년 각국 정상 또는 각료들이 유엔 본부에 모여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박태인 교수는...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일했다. 취약국의 거버넌스와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SPECIAL REPORT '각학각색(各學各色)'- 국제법학

북핵 · 인권의 딜레마, 꾸준한 관심이 해법

핵 포기, 개혁 · 개방 이뤄지면 인권 문제 변화는 자연히 뒤따를 것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6월 초 미국 내 기독교 · 힌두교 · 유대교 ·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이고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회담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에 인권 문제는 없었고,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했는지도 알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의 다른 한편에는 늘 북한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같이 지금까지 한미 당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보수나 진보를 떠나 일관되게 핵문제를 중요시해왔다.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한 시기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지 않았던 시기에 한정되었고,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로 탄생한 이 위원회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북한이 대화로 돌아선 지난해 이래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권과 같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의제를 꺼내기가 힘들다. 가뜰이나 더디게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반발로 대화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격하게 반발함으로써 한미 양국을 길들이고 있다.

북핵과 인권 문제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핵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에

자국의 안보 문제다. 자국 국민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반면 북한 인권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문제다.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포애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핵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양자택일이 아닌 조화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답을 구할 수 있다.

조금 더 폭넓은 시야로 보면 북핵이나 인권 문제는 북한 문제로 귀결된다. 1인 집권의 비민주적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시스템에서 기인한 문제기 때문이다. 핵과 인권 어느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효과는 비단 외교안보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경제 상황이나 인권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인권 문제만 유독 과거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지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가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것은 평화를 애호하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이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개혁 · 개방하며,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변화는 한꺼번에 찾아올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포괄적 요구에 거부감을 보일 것이다.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을 들며 대화의 판을 깔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북한도 다른 방도가 없다. 결국 꾸준함만이 그 해법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외교부 정책기획관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시급성 관점에서 비핵화가 더욱 중요

북 인권 문제는 김정은 체제와 연관...비핵화 이뤄도 강요하기 어려워
조성봉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두 가지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인권 보호보다 중요한 이슈다.

첫째는 시급성의 관점이며, 둘째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북핵 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북한의 핵무장이 심화되면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에는 전면전 또는 국지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돌이켜 보면 북미 대화가 있기 전인 지난해 초의 한반도 분위기는 매우 위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 되돌릴 수 없는 전쟁 역지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말 의회 연두교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어떤 정권도 잔인한 북한 독재자만큼 자국민들을 완전히 그리고 잔혹하게 억압하지 않았다”라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추구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압력(Maximum Pressure)을 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양쪽을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았던 미국과 북한의 분위기는 3월초에 급변한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을 다녀온 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난 후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면담했고, 전격적으로 북미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북미 회담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도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수출입이 크게 감소했고, 미국이 거의 전쟁 직전으로까지 북한을 압박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경제적제재를 비롯한 여러 압력을 가하는 게 필요했다.

다음으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 되려면 결국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 이는 북한 정권이 가장 마지막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비핵화보다도 어려운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위해 비핵화를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경제적 지원과 정상적인 외교관계까지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는 김정은과 북한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혀 다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1인 독재체제와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비핵화까지는 몰라도 인권 문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핵화는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이므로 미국·한국·일본 등이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내정간섭일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처칠은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과 함께 알타에서 회의를 한 내용을 회고록에 쓰고 있다. 여기서 처칠은 스탈린에 대한 소름끼친 기억을 말하고 있다. 곧 독일을 점령하게 될 터인데 이때 독일군 장교들을 모두 즉결 처형하자고 스탈린이 제안한 것이다. 처칠은 그런 무자비한 일을 어떻게 벌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처칠은 회고록에서 이처럼 인권을 말살하는 사람과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비핵화는 더 중요한 문제다. 인권 문제는 그 후에 논의할 문제다. **E**



조성봉 교수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자원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회동정

경제사학회

〈2019년 연말학술대회〉

- 주제 : 경제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적자본의 형성과 경제성장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14:00~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219)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

- 주제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Exploring New Direction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08:30~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대한지리학회

〈2019 지리학대회〉

- 주제 : 세계화 4.0시대의 사회통합과 포용, 지리학의 접근
- 일시 : 2019년 11월 22(금)~23일(토)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21세기관

한국경영학회

〈제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21일(수)
- 장소 :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한국경제학회

〈2019년도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움〉

- 주제 : 미래 디지털 경제사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일시 : 2019년 8월 30일(금) 13:00~17:40
-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특별포럼〉

- 주제 : 대학입시 및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13:00~16:40
- 장소 : 프란체스코회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 주제 : 민족주의, 지정학, 경합하는 국제질서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14일(토)
- 장소 : 국립외교원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제 62차 정기 학술대회〉

- 주제 : 농촌과 공동체 - 쇠락 속의 역동성 -
-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2일(토)
- 장소 : 안동대학교 창의인재관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 대학원생 포럼〉

- 일시 : 2020년 1월 31일(금)
- 장소 : 경북대학교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제 : 3만불시대 사회복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26일(토)
- 장소 : 송실대학교

한국사회학회

<2019년 정기사회학대회>

- 주제 : 공동체의 미래를 묻다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21일(토)
- 장소 : 고려대학교

한국심리학회

<2019 제73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 주제 : 돈과 마음: 소비와 축적의 심리학
- 일시 : 2019년 8월 22일(목)~24일(토)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한국언론학회

<사회적갈등과 미디어 세미나>

- 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14:0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여성학회

<2019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제 : 페미니즘,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넘어서다
- 일시 : 2019년 11월 16일(토) 9:30~18:40
- 장소 : 중앙대학교 R&D 센터(102관)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주제 : 혼돈의 국제 질서와 한국 정치의 미래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7일(토)
- 장소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한국행정학회

<2019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주제 : 현장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2)
-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14일(토)
-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협의회 행사

01

협의회 회의

- 운영위원회와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 공동 회의
일시 : 2019년 8월 7일(수) 오후 6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 2019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단체장 간담회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장소 : 광화문 교보빌딩 세미나실
주제 : 한국연구재단 연구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KSSJ 편집위원회 회의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오크룸
- 차기회장단 회의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 2019년 이사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2시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02

학술 활동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심포지움 공동 개최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15:30~18:30
장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주제 : 신남방지역 정세분석 세미나 : 동남아 3국 및 인도의 선거 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제언
- 23차 A ASSREC(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 베트남 회의 참석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9월 26일(목)
장소 : 베트남 사회과학원(하노이)
주제 : Security and Equality for Sustainable Futures
논문 발표자 6명 참석
- 심포지움 및 정기 총회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4:00~20:00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
주제 :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환

03 중앙 이코노미스트 “각학각색” 연재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안민포럼, 중앙 이코노미스트 공동 기획

주 제	게 재 일
북한 비핵화 VS 인권 보호 어느 것이 우선인가	2019년 7월 22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2019년 12월 게재 예정

04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님의 번역으로 서울대학교 김석호 교수님의 논문 (제목 : “韩国青年梦想资本测定现状与分析”)이 중국 학술지 <국외사회과학> 2019년 제4기 (107 - 111쪽)에 번역 게재 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한국사회과학의 연구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료를 지원하였습니다.

05 2019년 12월 발간된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KSSJ) 46권 2호 사사표기에 오류가 발견되어 (NRF-2016S1A3A3923036)에서 (NRF-2019S1A3A3079108)로 정정 안내드립니다.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전)한국정치학회 회장
부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전)한국경제학회 회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	(전)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	(현)한국교육학회 회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현)한국행정학회 회장
	박길성	고려대 사회학	(현)한국사회학회 회장
	감사	변종국	영남대 경영학
	서현진	성신여대 사회교육학	

이사회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집행위원회

분 과	성 명	소 속	비 고
연 구	한 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 석 호	서울대 사회학	
	김 옥 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박 정 수	서강대 경제학	
	배 영	송실대 정보사회학	
	서 은 국	연세대 심리학	
편 집	엄 석 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위원장
	권 헌 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법학	
	조 명 환	서울시립대 경제학	
	최 성 주	경희대 행정학	
	하 병 천	서강대 경영학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 세 건	강원대 인류학	
	박 상 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행정학	
	박 은 실	추계예술대 예술경영	
	박 경 미	전북대 정치외교학	
	이 승 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사 무 국	한 정 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장
	전 성 희		간사

운영협의위원회

학 회	성 명	소 속
경제사학회	정 성 일	광주여대 서비스경영학과
국제개발협력학회	권 혁 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이 용 우	국토연구원
한국경영학회	김 용 준	성균관대 경영학과
한국경제학회	이 인 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한국교육학회	김 성 열	경남대 교육학과
한국국제정치학회	손 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임 경 택	전남대 일본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정 무 성	송실대 사회복지학부
한국사회학회	박 길 성	고려대 사회학과
한국심리학회	조 현 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한국언론학회	김 춘 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한국여성학회	김 경 희	중앙대 사회학과
한국정치학회	장 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한국행정학회	김 동 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03028, Korea

T.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